

◆특집 : 재야 단체들의 위상에 대한 시각 정리

역할에 걸맞은 실천력 확보 시급

를 둘러싸고 민민운동 상층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비조직적이고 비합리적인 양상은 그 논리의 정당성 책임의 소재여하를 막론하고 민민운동조직에 뿐만 아니라 자주적 대중조직에도 적지 않은 혼란과 실망을 야기시켰으며 총체적 운동의 보다 큰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이 일단 명백히 지적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당결성 이후 노골화된 폭력탄압 및 금융실명제철폐 토지공개념퇴각 투기조장 재벌특별감화 등 반민중적 경제정책과 그로 인한 물가안정·집세폭등 등 민생파탄에 대한 광범한 대중적 공분을 바탕으로 자주적 대중조직들이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민민운동도 그간에 보여준 대소간의 혼란과 분열상을 어느정도 진정시키고 강화된 투쟁전선을 구축하는데 대한 활발한 모색과 나름대로의 실천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은 일단 바람직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를 전제로 삼으면서 그간의 슬픈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픔으로 남아 있는 합법정치전술과 대중정치투쟁을 현시기 주요운동방식의 문제 및 민민운동의 정치적·조직적 구성의 구축문제와 관련된 전민련·국민연합·민연추 각각의 역할구분과 위상정립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II. 합법정치전술과 대중정치투쟁

87년 대총선거 당시 독자후보론이 제기된 이래 합법정치전술 채택에 관한 문제는 민민운동의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되어 왔다. 특히 작년 전민련 결성 이래 민민운동의 상층부에서는 거의 이 논의의 날을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결국 얼마 전의 전민련대의원대회 표결을 계기로 합법정치전술 채택을 주장했던 측이 전민련을 탈퇴하여 기존의 친민주적 대중조직을 위한 준비모임과 합류,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이하·민연추)를 결성함으로써 일단 실천적 입장의 국면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그 논의 및 처리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앞으로 일정 기간 민민운동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논쟁의 초점은 합법정치전술의 필요성 여부보다도 합법정치전술 채택의 전제조건 및 시행방식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합법정치전술의 채택, 즉 합법정당건설을 주장하는 측은 87년 이후 놀랄만큼 진출한 민중들의 격화된 투쟁과 이에 대응한 지배세력의 보수대연합으로 인해

시상조작과 지배세력의 분열구도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소부르조아적 급진성과 교차되는 개량주의 및 합법주의로 귀결될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한 다.

실제로 이같은 위험성이 확실하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반대논리가 일정부분 타당성을 지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6·29선언부터 3당합당에 이르는 전과정을 놓고 볼 때 민중세력의 힘이 보다 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지배세력의 힘과 맞먹거나 지배세력을 압도하는 차원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다른 것이다.) 여기에서 현재 인민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를 접하게 된다. 그것은 이같은 인민운동의 정치적·조직적 중심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 국민연합의 위상정립, 즉 전민련과 국민연합간의 관계 조정의 문제이다. (5월4일 한시적으로 발족한 'KBS-현충노조' 탄압 분쇄 국민회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권측으로부터 결집하면 체제안정의 구세력으로 오인(?) 받는 사후전투기술적 노동자들의 대중 조직인 12개업종노동조합연맹(현의회)와 언론인 단체들이 앞장서서 각계각층을 추동한 결과 결성되었다는 점에서 한계 못

전 노협, 전농, 전민련, 전교조, 전대협 등 자주적인 대중조직들의 '민중연대회의'를 바탕으로 전민련과 민연추 및 각계 단체들이 모여 3당합당을 직접적인 계기로 삼아 '민자당' 일당 독재분쇄 및 민주헌정정착 국민연합'을 한시적으로 결성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국민연합은 결성 직후 5·9민자당 국민연지지투쟁을 대성공리에 치루며으로써 일단 대내외적으로 그 운동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국민연합을 한시적인 공동투쟁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자세한 사항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실정을 통해 채워지고 있는 과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전민련과 국민연합간의 위상정립문제와 관련하여 나오고 있는 견해들을 보면, 첫째, 국민연합을 발전시켜 전민련을 그 속에 해소할 수 있다는 견해, 둘째, 국민연합의 한시적 성격을 명확히 하면서 전민련을 확대·개편하여 국민연합을 흡수하는 실질적인 통전체로 발전시키자는 의견, 셋째, 둘째와는 다소 다른 의견으로서 국민연합의 한시적 성격을 명확히 하더라도 국민연합이 내건 목표가 단시일 내에 이뤄지기 힘든 것임을 감안하여 국민연합을 전민련에 포함하기 어려운 대안을 모색하여서 보다 낮은 수준의 반정부 대중 정치투쟁과 민중생존권투쟁을, 전민련은 전민련대로 이를 통일투쟁을 위한 자주, 민주, 통일투쟁을 높은 수준의 민주투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발전을 계속해 나간다는 견해를 들 수 있다.

이 중 첫째 견해는 전민련이 다름 아닌 자주·민주·통일을 향해 투쟁하는 이데올로기의 우리 민민운동의 거의 모든 성과를 집약시킨 실체라는 점을 볼 때 민족의 한시적 평준화이자 역사적 목표라는 결과를 빚을 우려가 크다고 보여진다. 또한 두번째 견해는 전민련을 보다 강화·발전시켜서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전민련에 위력있는 자주적 대중조직들이 별로 참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국민연

합을 보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역으로 국민연합의 발전이 전민련의 확대 강화에도 도움이 되며 또한 필요하다는 현실을 감안한 다소 이상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IV. 맺는 말

우리의 전반적인 운동현상으로 볼 때 세번째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여지지만, 한가지 부연해두고 싶은 것은 날로 변화해가는 운동 현실에 애초에 계획되거나 짜여진 구도대로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며 주체적인 실천이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전민련과 국민연합간의 위상정립문제는 국민연합에도 불필요가 있다.

전민련이 전민련에게 부여되고 인정되는 임무와 위상에 걸맞은 실천을 한시라도 소홀히 한다면 그 역사적 위상은 언제라도 다르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 점은 비단 전민련과 국민연합뿐만 아니라 민민운동에 복속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간의 합법정치전술을 에워싼 논의와 관련하여 한분쯤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안 중 민

< 전국민중기술 노동조합 연맹 전문위원 >

‘정치전술’ 논의에만 치중, 전체 운동에 지장 초래 민중역량 결집위한 전민련·국민연합의 위상 정립돼야

민중의 대립전선이 기존의 민주 대 반민주 전선보다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합법정당은 과거 변혁운동에서의 상층과는 달리 우리의 변혁운동에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 이에 반대하는 측은 87년 이후 민중들의 진출이 현저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반민주적 파쇼체제의 본질과 우위성이 변화한 것은 아니며 다만 지배방식이 변화된 것이라 불라고도 한다.

그나마도 89년 이후에는 5공보다 더 극심한 폭력탄압지배가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민주 대 반민주 대립전선이 여전히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더구나 지배세력이 인위적·허구적으로 보수·혁신대립구도를 조작하는 가운데 민주세력을 고립분리시켜 말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반민주 구도를 볼 때,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6·29선언의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구도가 본질적으로 다르게 변화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백하다. 이렇게 볼 때,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및 합법정당의 건설주장은 다소 적절치 못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합법정당 건설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합법적인 정치공간의 활용의 중요성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단지 합법정당이 말 그대로 개량이나 반혁명적 지향의 관지하려 한다면 할수록 '거리'의 반합법·비합법 대중정치투쟁과 긴밀히 결합되어야 하고, 파쇼적 탄압상황을 염두에 둘 때 인민운동의 중심이 결코 합법정당에 위치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할 뿐이다.

오호라 합법정당과 합법정치전술은 인민운동의 반합법·비합법 중심체가 지도·지휘하는 반합법·비합법정치전술과 긴밀히 결합될 때 그 최고의 (결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통상적인 역할분담론과는 명백히 차원

이 다른 것이다.) 여기에서 현재 인민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를 접하게 된다. 그것은 이같은 인민운동의 정치적·조직적 중심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 국민연합의 위상정립, 즉 전민련과 국민연합간의 관계 조정의 문제이다. (5월4일 한시적으로 발족한 'KBS-현충노조' 탄압 분쇄 국민회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권측으로부터 결집하면 체제안정의 구세력으로 오인(?) 받는 사후전투기술적 노동자들의 대중 조직인 12개업종노동조합연맹(현의회)와 언론인 단체들이 앞장서서 각계각층을 추동한 결과 결성되었다는 점에서 한계 못

III. 전민련과 국민연합

전민련이 지배세력의 탄압과 내부의 합법정치전술에 관련된 논의 등으로 인해 침체·분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배세력의 집적적인 침탈에 위기감을 느낀

제로 전민련이 대체로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자주', '민주', '통일'을 운동의 목표로 하는 초보적인 통일전선조직이자 연합운동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국민연합은 '한시적인 공동투쟁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자세한 사항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실정을 통해 채워지고 있는 과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전민련과 국민

졸속외교의 희생양 재일 교포

◇독자투고 ...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지난 4월 30일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타결된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은 재일 한국인이 가지는 역사상과 당사자인 재일 한국인의 의사를 배제한 졸속협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일본은 1910년 한일합

방으로 피지배 민족으로 전락한 한민족을 패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거처면서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 한국인에 대해 무국적자로 처리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 엄밀하게 재일 한국인-협정 영주권소유자는 한민족

총 68만명 중 33만정도에 불과하다. 즉, 양국 정부는 협정 대상조차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종결지은 것이 다.

1951년 이후 7차례에 걸친 한일회담이 65년에 타결되고 '한일 기본조약 및 법적지위협정' 등이 조인되었다. 이후 그이전까지 단일했던 법적지위에서 국적문제에 남북한으로 양분되기 시작한 것이다. 즉 한국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해서만 일본 정부는 협정 영주권을 부여하였고, 당시의 박정호를 비롯한 조약에 대해 박정호 3억, 유상 2억의 배상금 명목-차관으로 대일 청구권을 대신 하였던 것이다.

1988년 12월부터 진행된 재일 한국인법적지위에 대한 협상은 그 본질이 묘하게 왜곡되어왔다. 이번 협정에 발표된 4가지 약제-지문날인 철폐, 강제퇴거조건의 완화, 등록제 실시, 재입국 허가기한의 연장-은 재일 한국인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재일 거류민단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현안문제는 지방자치권 보장(23.4%), 외국인 등록법상 지문날인제 철폐(23.1%), 공무원 채용시 국적조항 철폐(19.3%), 민간취업시 차별 해소(11.2%), 협정 영주권(10.9%)등으로 나타났다. 참정권과 취업의 문제는 생존권의 차원임

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한시한 것은 기본권과의 침탈이다. 또한 소수민족으로서 당연한 기저야 할 민족교육의 문제와 사회보장의 문제는 생활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결과물은 위의 내용을 배제한채, 현재 4명뿐인 3세에 한해서만 적용하며, 1·2세는 이에 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있는 것이다. 65년 한일회담 당시 91년 1월까지 교포 3세에 대한 법적 지위 협상을 유보한 이유는, 25년 후면 귀화를 귀국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 한다. 졸속의 교과는 비판을 한 물에 지닌, 65년의 한일협정을 한국 정부는 역사속의 과오로써 인정해야 하며, 이번 협정에서 또다시 재일 한국인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 즉, 재일 한국인 당사자의 주체적 요구가 반영된 들어야 하는 것은 일본 각계의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러한 때에 기본권과 마저 무시한 협상의 내용과 방향을 밑미로 협상을 종결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한·일관계에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인 것이다. 또 한정부의 실질적인 협상이나 조약을 많이 양보하고, 감정적인 사고로써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세라는 비판이 높다.

정부의 정치적 침묵과 반대급부적 보상에 치중한 외교 형태와 일본 정부의 과거사 문제를 부정하는 태도는, 민족적 자존심에 대한 상처일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는 자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임 재 식

< 정외·4 >

보안법 시대의 대동제

87년 늦봄 새벽, 나는 본관 앞 잔디밭에 길게 누워 지난밤 내가 누빈 주점이 몇 개 인가, 주마등 처럼 지나가는 어지러운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 다.

라 부르고 그것이 일본식 표현이라 하 게 대동제'라고도 한다. '큰 무리'가 일제 때의 지대로 함께 어우러진다고 나 할까?

일단 대동제 기간이 되면 화내 곳곳

고 그 속에서 우리 학우들은 무언가 뒤돌아 잔고 허탈한 '남만'과 '자유'를 즐긴다.

그러나 그 '축제'의 껍데기를 한 개 풀 벗기면 거기엔 반드시 '비판'과 '저항'의 '대동단결'의 보석만 박혀 숨쉬고 있다.

각 과와 단대에서 민주적 토론과정

연의 모습이 보다 많고 학우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학우들의 하울이 위상을 전도시킨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로 동등한 나로서는 조국의 풍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대들의 '남만'은 기록의 화유일 뿐이고, 그대들의 '자유'는 현실의 배반이요 절박한 조국의 부름에 대한 외면일 뿐이라고...

올해 교황 대동제에도 어김없이 '민주포함'이 결성되고 '순회 재판소'가 설치된다고 한다. 이것은 곧 대동제가

용하여 '감금'과 '보호관찰(여학생의 경우)'로 처벌받고 있다.

그러나 '대동제'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말대로 '공통체의 성원 모두가 일치된 의지로 한데 어우러진다'는 본연의 내용을 담보해지지 못하는 것이라 할 때, '제재'의, '반면'이 대동제 폐해의 외연을 축소해내고 그 자체로서 흥미롭기도 하지만 본질적 문제 해결은 다른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사실 대동제는 이전의 모든 사업을 총괄 정리해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세줄과 사회의 날줄로 조건지워지는 청년학생의 자주로운 이념, 지향의 총체적, 문화적, 실천적 표현의 장이자 학원에서의 공동체적 삶과 통일·단결의 기풍을 심어내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막걸리 보안법'도 좋고 '감금'도 좋지만 원칙과 근본을 먼저 옮겨 놓아 나가자. 정치적 사안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목적의식적으로 분임토의, 과토론을 잡아내자. '보안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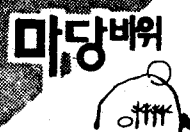
대학문화의 총괄적 결정체

대학문에 첫발을 내디딘 87년 늦봄, 지난밤 내가 누빈 주점을 생각하며 이것이 바로 '대학의 낭만'이요 '자유'라고 느꼈던 것 같다.

은 무슨 문화제다, 연주회다, 경연대회다, 연일 행사가 풍성할 뿐 아니라, 주점이다, 게임이다 하여 짝짝하게 돈벌이 하는 장사치들도 많이 생기고, 학우들은 이성의 남·여 학생을 찾아 교정을 거침 없이 활보하고 다니다 때로는 타대학 원정도 감행한다. 그리

을 거쳐 집단적으로 준비된 내용이 일만 경회인이 한 자리에 집결한 가운데 펼쳐지기도 하며, 노천극장, 대운동장에서 서를, 수월 전체 경회 학우들이 일제 단결된 모습으로 우리들의 요구와 지향을 기운차게 내뿜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대동제 본

지나치게 왜곡되어지고 흥행망쳐 거리로 '놀자판'이 되지않게 하기 위한 치료적 방편일 것이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고 '풍경을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아주 주요하게는 '막걸리 보안법'과 '치안 유지법'을 집적적으로 적



김 정 목
< 법학·4 >

'아! 내가 웬 술을 이리 많이 마셨지? 그대 지금은 내가 대학문에 들어서 처음 맞는 '축제'야!'

그때 나는 애매한 미소로 이것이 바로 '대학의 낭만'이요 '자유'라고 느꼈던 것 같다...

우리는 흔히 '대학축제'를 '대동제'

우리들의 일과 삶을 가꾸는 소리...

'목동은 놀자판과 농우(農牛)를 보살피다 드물게 풀먹이고 이를 풀자로 뜯겨 그루같이 모심으려 제 몸을 빌려준다...'

농가월령가의 한 구절처럼 5월이 되면, 이 땅의 곳곳에서는 우리들의 일과 삶을 가꾸어가는 소리들로 분주해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날이 저를 깨우면서, 바쁜 대문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일용할 양식을 애써 가꾸는 건강한 모습들이 농촌에서, 어촌에서, 도시에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재능의 삶을 진솔하게

가꾸어 나간다면, 대지(大地)는 또한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며 스스로를 일구어줄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와도 같이 편안하고 포근하게 이 땅의 삶을 감싸안을 것입니다.

그러하여 이 좋은 계절에, 우리들이 대지를 굳게 밟고 설 때,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나누는 일을 소중히 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대우가 있습니다.